

# 세계화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본지 편집주인이다.

현 세계질서는 WTO체제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지역주의와 보호주의의 증대, 곧 블록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1 세기를 눈 앞에 둔 현재의 세계사회는 가히 대전환기라 부를 만하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유럽과 북미의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변동은 물론 사무자동화·공장자동화로 대변되는 극소 전자혁명,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쇠퇴와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같은 국민국가 내의 변동이 그 대표적인 징후들이다. 이제까지의 사회질서를 급속히 해체시키고 있는 이 징후들은 그 질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전환기는 '과거의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위기의 시대'로 바뀌어 있을 지도 모른다. 특히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종언'을 함축하고 있는 세계화와 블록화의 경향은, 윈도우 95, 플로 티셔츠 그리고 일본문화 개방 논쟁으로 상징되듯이, 먼 산의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라 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지난 20년간 세계질서는 전후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구조의 소멸로 특징지어진다. 역사적으로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진행돼왔다. 그 첫 단계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시작하여 '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로 구체화되고, 일본·독일의 부상과 함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새로운 다극적 권력구조가 형성된 시기다. 이어 두번째 단계는 1989년 동유럽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시작하여 미소의 군축회담 결과 전후 냉전체제가 공식적으로 종식되는 시기다. 이른바 탈냉전의 시대라 불리는 '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이러한 구조적 변

현 세계질서는 세계화와 블록화라는 상호모순적인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APEC 정상회담.



동은 현재 상호모순적인 듯한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세계화가 그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유럽연합(EU),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와 보호주의의 증대, 곧 블록화 경향이다.

###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화, 세계화와 블록화

세계경제의 세계화는 금세기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통해 꾸준히 증대돼왔다. 세계 각국과 각 지역은 교역·투자·통신·교류의 확대로 상호 의존관계를 증대시키고 또한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하여 '국경 없는 경제'를 가져왔고, 이것은 다자간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협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러한 세계화 경향은 최근 더욱 두드러졌는데, 세계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추창하는 우르과이라운드와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특히 초국적기업은 전후 세계경제의 전 지구화를 주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특히 '6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대량생산체제의 위기로 인한 신국제분업의 진전을 통해, 그리고 '7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선진국의 상호의존 증대를 통해 가속화됐다. 특히 극소전자기술의 등장에 기초한 생산체제의 유연화는 생산과정의 배치에서 부품 및 자재의 적기조달을 중요한 과제로 등장시켰는데, 이것은 시장의 효과가 큰 인접지역에로의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정보 및 문화의 국제화도 주목해야 할 전 지구화 경향의 하나다. 뉴스뿐만 아니라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각종 대중음악, 전신 및 통

신 프로그램 역시 전 세계 국민들이 향수할 수 있도록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국제정보질서'라고 불리는 문화 및 정보의 생산·분배·소비의 국제적 체제는 근대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는 바도 없지는 않으나,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제3세계 간의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에 특히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채널에 미치는 선진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예컨대 미국 IBM은 국제정보의 흐름, 컴퓨터 및 프로그램 공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미디어 제국주의'라고 비판되는 이러한 흐름은 그 어떤 서구의 기술보다도 훨씬 깊게 일상적인 삶에 침투한다는 점에서 제3세계 문화적 주체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 다극화 현상과 신보호주의의 대두

'70년대 후반 이후 관찰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동의 다른 하나는 다극화 현상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대략 50%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으나 1990년 그 비중이 25% 정도로 감소된 반면에, EU와 일본은 각각 25%, 16%를 차지하여 미국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업국가들도 그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다. 미국은 물론 걸프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에 직접적으로 군사행동을 직접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도 다른 국가들의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 다극화 현상은 지역경제 협력의 강화 현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EU는 이 지역경제 협력의 대두로 현재 단일시장 형성을 마무리짓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화 동맹과 정치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동의 다른

하나는 다극화 현상이다.

덧붙여 주목할 것은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의 대두다.

다극화 현상은 지역경제 협력의

강화 현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 또한

신보호주의 경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으려는 NAFTA를 체결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1989년 APEC이 창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지역적 경제협력력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덧붙여 주목할 것은 기술보호를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의 대두다. 기술보호는 현재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주요한 항목으로 지목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기술이 외국기업에 대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률로써 이 기술이 사용된 제품수출을 사전에 막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 또한 신보호주의 경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리우회의에서처럼 지구 온난화 방지, 생태계 파괴 금지, 생물 다양성 유지 조치 등 전 지구적 환경보호 선언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환경기준이 낮은 중진국들이 환경개선 요구 조건을 들어 수입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다.

### 세계화와 블록화는 상호모순적인 현상인가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구조적 재편은  
 동아시아 지역에도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북미지역과 비교해서 특히  
 지역경제블록에 상관없이 특정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화의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상호모순적인 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하나 확실한 것은 최근의 지역블록화는 금세기 초반 제국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의 블록화와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1920~30년대 블록화가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철저하게 배타적인 시장구축을 겨냥한 것이라면, 현재의 그것은 역내 무역비중의 증대가 보여주고 있듯이 경제적인 수준에서의 '상호의존 속의 경쟁'으로 특징지워진다. 역내시장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EU·미국·일본 간의 상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이 '경쟁 속의 상호의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호의존 속의 경쟁'이 궁극적으로 자본에 내재한 세계화 경향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그 중간단계로서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상당히 장기적인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 동안 미국 헤게모니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일본과 독일이 이 블록화를 매개로 지역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쟁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EU가 경제통합을 넘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해체하여 서유럽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군대창설을 통한 정치·군사적인 통합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

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블록화는 기존의 국가이기주의를 넘어선 지역이기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며, 이 지역주의는 당분간 지역 상호간의 배타적인 장벽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 블록화 그리고 국민국가의 위상에 관해서는 현재 민족주의적 접근과 국제주의적 접근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견해가 초국가적인 통합에 따라 개별국가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 후자의 견해는 국가주권을 현재의 다원적인 조건에 기초해 전향적으로 재규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각각 일면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개별 국민국가들은 세계체계(국제분업, 국제적 국가체계, 국제조직) 혹은 지역적 체계에 동일하게 통합된 것이 아니며 또한 세계적 및 지역적 통합과정이 개별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위상은 점차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정한 국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신과 정보의 세계화는 공통된 인류의 이해와 가치를 형성시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적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감각을 재강화시킴으로써 역으로 민족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점에서 세계적·지역적 조직과 국민국가간의 통합과 갈등의 모순적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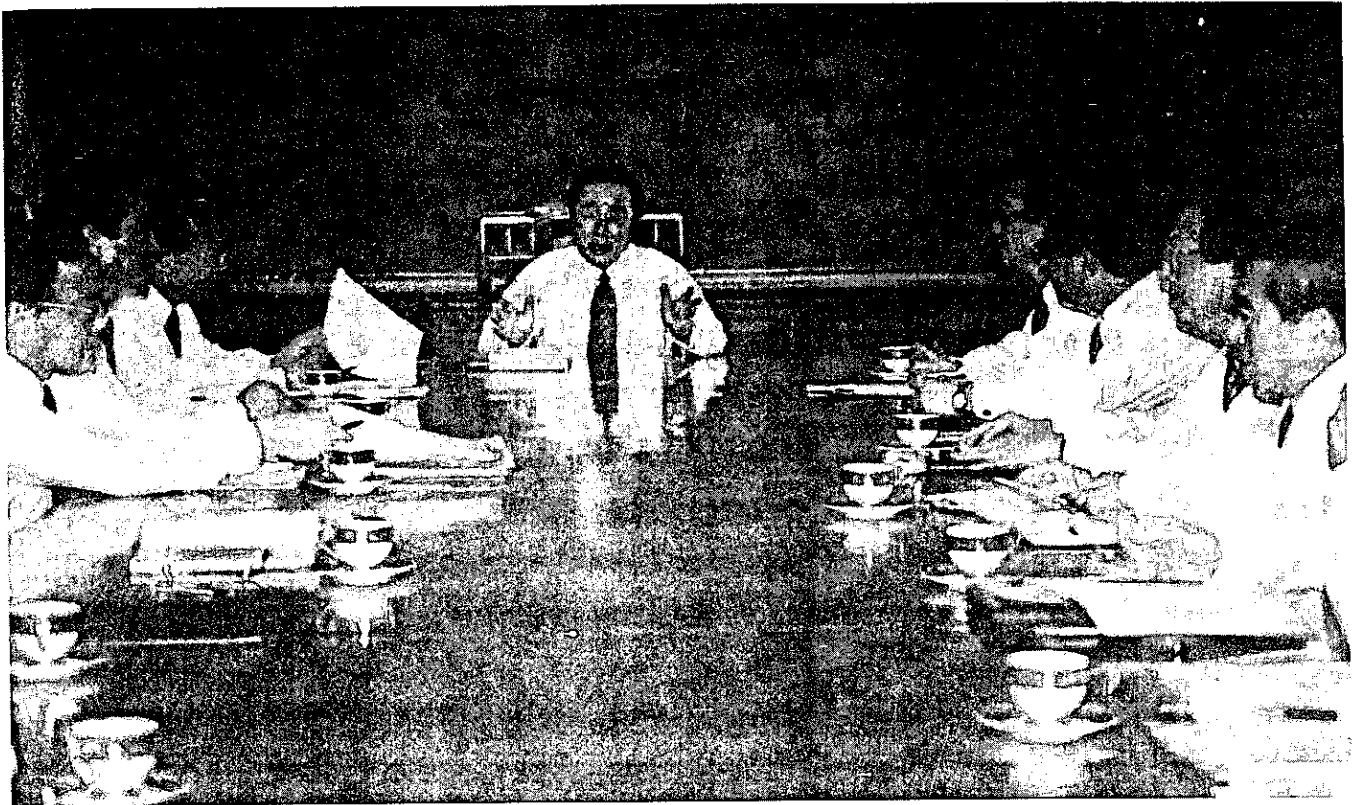
### 세계화 흐름과 동아시아의 특수성

세계질서의 이러한 구조적 재편은 동아시아 지역에도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현재 자유무역지대나 단일시장권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

은 유럽과 북미지역과 비교해서 개별국가들간의 발전 격차가 대단히 크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블록에 상관없이 특정국가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화의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암시하는 바는 이 지역에서도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여 어떤 형태로든 통합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은 수평적 국제분업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국제분업에 기초하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통합과정에서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의 부상 또한 이 지역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변수의 하나다. 현재 중국은 탈냉전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의 가장 단적인 사례가 대외적으로 한·중 수교이며 대내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의 심화, 확대다. 한편, 최근 후발 신흥공업국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은 국제분업구조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특화시키는 전략을 기반으로 그들의 발전모델인 선발 신흥공업국가(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을 낳고 있다. 한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경제발전단계, 자원부족 상황, 산업구조의 모든 면에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여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특히 일본의 기술 및 자본에 의존해야만 지속적인 성장



지역통합 추세에 따라 우리도 국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역내 약소국가들과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사진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과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블록화 흐름 속에서 일본 및 미국 경제로의 통합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한국사회가 갖춰야 할 대응전략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응전략을 갖추어야 하는가. 주지하듯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과거 성장을 주도해온 요인들인 후발의 이점이나 경제만을 위해 모든 자원과 권력을 동원했던 권위주의적 사회운영방식은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및 후발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은 그 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기초재 및 자본재 분야의 전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전문제품 생산을 특화하여 급변하는 세계시장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생산성 증대 전략은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반한 것이 아닌, 실질임금의 상승에 입각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화는 세계질서의 재구조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수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EU와 NAFTA에 대응하여 범아시아적 지역통합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무관심과 국가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이 지역의 약소국가들과 새로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상호보완적인 지역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역내국가들의

주권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개별국가간의 공동결정에 대한 민주적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주적 공동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수직적인 성격이 강한 이 지역에서 특정국가의 독주를 제어하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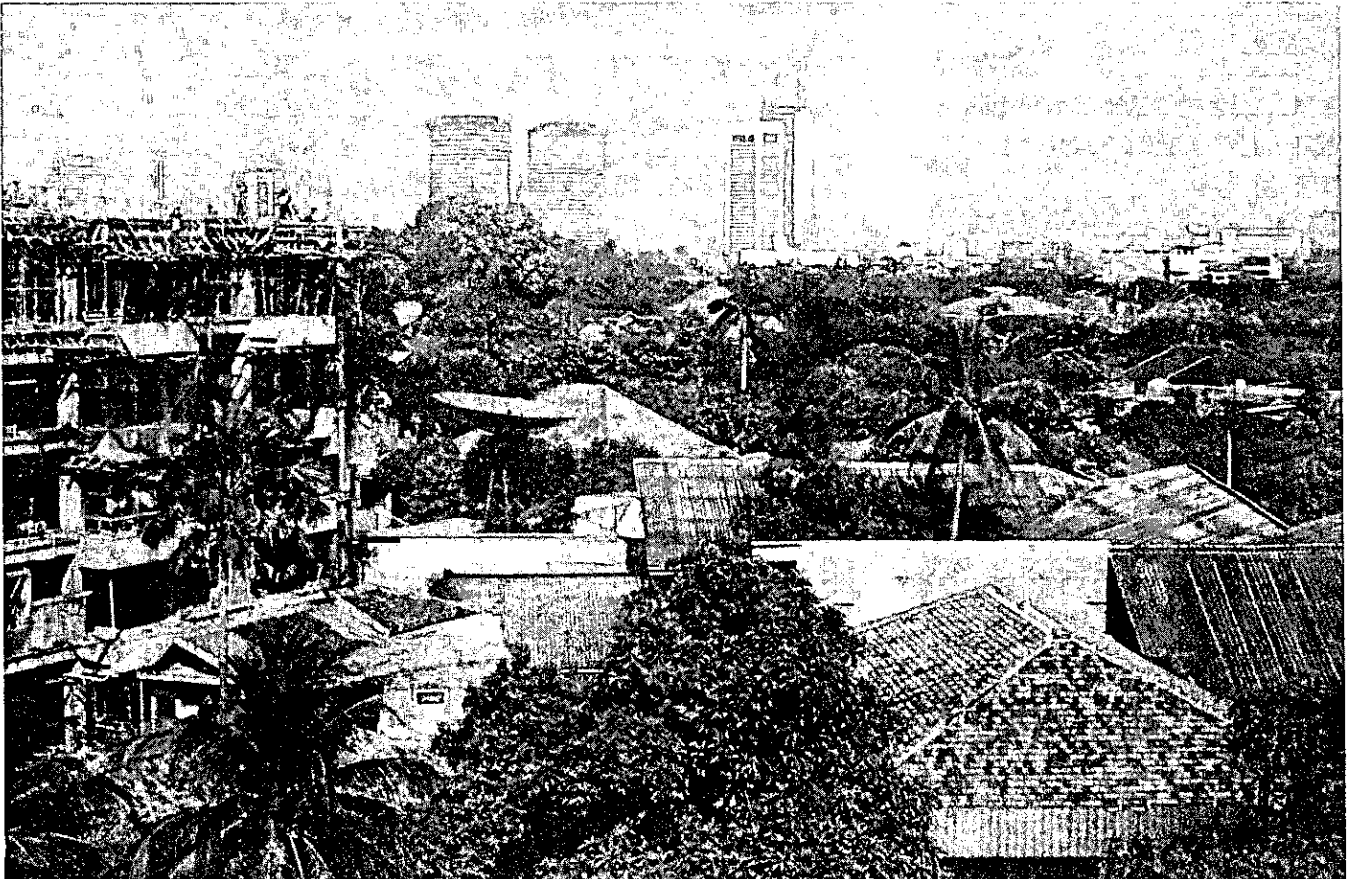
나아가, 지역적 발전의 격차가 매우 큰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통합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선진지역의 사회보장제도 하향화와 후진지역의 구조적인 의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시적인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후진 지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범지역적인 사회보장이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목표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한국기업 가장 싫어한다”

김은영  
해외진출기업문제 특위 간사이다.

몇 년 전부터인가 국내의 인력난과 고임금에 떠밀려 많은 한국기업들이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주로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은 단기간에 투자 이익을 거두기 위해 '60~'70년대 한국의 가혹한 노동통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지 노동자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간적인 경영방식, 억압적인 노무관리, 잦은 노사분규 등 최근까지 국내에서만 익숙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해외로부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와 함께 노동자와의 마찰 또한 심각해지리라 전망하며 기업의 투자 현황과 애로점, 노동자와의 갈등 등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활동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첫 사업으로 지난 5월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으며, 그후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첫 조사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선정, 지난 7월 4명의 조사단이 현지를 다녀왔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1968년 최초로 이곳에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래 현재 300여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인** 구 1억 9,000만 명. 25년간 연 평균 6.8%의 경제성장 달성. 8, 9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 비중. 300여 개의 한국기업 진출... 이런 저런 숫자, 통계, 도표를 뒤적이고 들여다보고 머릿속에 쑤셔넣으면서, 한편으로는 몇 마디 인사말과 수, 시간 등의 표현을 익히면서, 그렇게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7월 9일 늦은 아침,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좋은 사람 만나면 돌아오지 말라는 등, 뺨을 사오는 것 잊지 말라는 등, 마치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을 발리섬에라도 혹은 원시 밀림에라도 가는 양 여기는 주위의 부러움 속에서 솔직히 설레임을 느낀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3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온다습무풍이라는 지독한 더위와 이질적인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을 마음에 들어할 지 걱정이 앞섰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인권침해자인 한국인으로서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도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어렵게 간 걸음이라 마음 같아서는 인도네시아 전체는 힘들어도 자바섬 하나 만큼은 통째로 휘저으며 조사하고 싶었지만, “인도네시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한 현지통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한국의 20배가 넘는 국토의 인도네시아. 그 하나인 자바섬. 그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마지막 한 주건을 반둥, 보고르, 수라바야 등의 지방에서 보냈다.

### 화장실도 시간 맞춰 가야 하는 한국기업

“어머, 저 사람 예쁘다! 어머, 저 남자 참 멋있다, 수염 좀 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나를 함께 간 일행은 ‘지조 없는 여자’라는 오명을 씌웠다. 그렇지만, 갈색의 조그마한 얼굴에 늘상 미소를 달고 다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만나면 보는 것마저 기분이 좋아지는 걸 어찌랴. 하지만, 내 눈에만 예뻐보이는 것일까? 지나친 생각일 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가족들을 한국에 남겨둔 채 혼자 몇 년씩 나와 있는 한국 남성들이 떠오르면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보는 우리에게 속속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만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연애를 하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트집을 잡아 해고시켜 버린다거나, 임신시켜놓고 유산하게 한 다음 다른 여자를 사귀다가, 이미 결혼한 기혼자이면서 속인 채 위장결혼을 하고는 한국으로 돌아가버린다는 등등의 얘기들이다.

한 노동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묻는다. “왜 한국사람들은 우리더러 일만 하라고 하죠?” 한국인은 “그렇게 쉬면 언제 부자가 되느냐”며 잠시라도 쉬게 내버려두지 않는단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화장실 사용조차 엄격히 제한한다. 노동자 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화장실에 갈 때는 꼬박꼬박 카드에 기재해서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게 왔다고 욕박지른다. 게다가 어떤 곳은 하루 3번 화장실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갈 수조차 없다.

장시간 노동에 즐기라도 하면 화를 내고, 자면 해고다. 해고시 수당으로 석 달치 임금을 쥐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파서 조퇴를 하고 싶어도, 약을 타고 싶어도, 심지어 고향의 부모가 상을 당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증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퇴근시간이 되도 일을 다 못 끝냈으면 마저 하고 가야 한다. 대개의 경우, 미리 불가능한 목표량을 설정해놓는다. 이때 잔업수당은 물론 없다. 한 번은 한국인 관리자가 “한국에서는 일을 끝내지도 않고 그냥 퇴근하진 않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 노동자가 “그럼 당신 한국에 있지 여긴 왜 왔느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국 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거짓말을 잘 하고, 일을 시키면 그것 하나만 할 줄 알지, 깊이 생각해서 응용할 줄을 모른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민답게 성미 급하고 지나치게 성실한 한국 관리자들에게 이슬람 전통에 따라 일하다 말고 기도한답시고 자리를 비우는 노동자들이 몹시 못마땅할 것이다. 3, 4년 이곳서 일하고 있는 한 관리자는 이젠 포기한 표정이다. “아이구, 할 수 없죠. 이들 종교인데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엔 못 하게 했다가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이젠 대부분의 기업들에선 허용하고 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불만이다. 단 30분 동안 몇 백 명의 노동자들을 교대로 기도하게 하니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10분은 해야 하는 데 1분씩만 하라고 한단다.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낫다. 심한 경우는 기독교 신자인 사장 덕택에 즐지에 예배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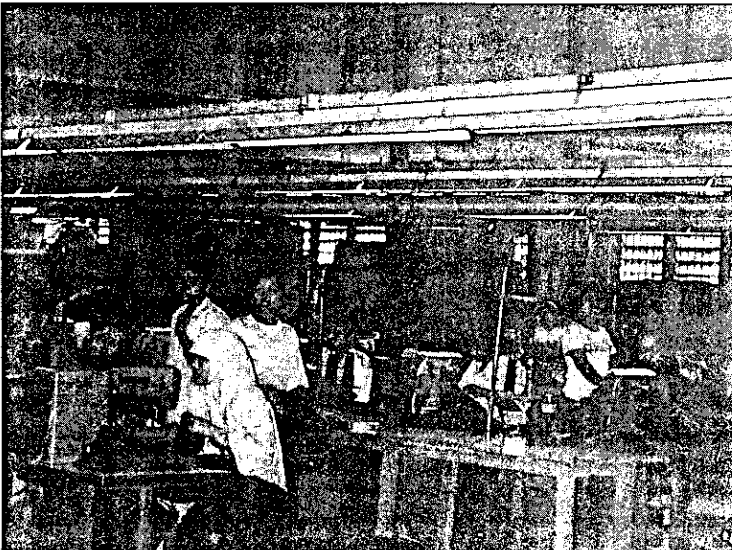
“왜 한국사람들은 우리더러 일만 하라고 하죠?” 한국인은 “그렇게 쉬면 언제 부자가 되느냐”며 잠시라도 쉬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화장실 사용조차 엄격히 제한한다.

## “한국사람은 슈퍼 앵그리 맨, 한국기업은 거짓말 1등”

“한국사람 슈퍼 앵그리 맨(Super Angry Man)이에요” 한국사람은 화 잘 내고 소리 잘 지르고 잘 던지기로 정평이 나 있다. 입이나 맞춘 듯 만난 노동자들에게서 한결같이 듣는 말이다. 언니라고 불리우는 한국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다 거친가요?” 앞서 말했듯, 얌전하고 잘 웃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겐 그렇지 않아도 뚱하니 표정없고 무뚝뚝한 한국사람이 무서울 텐데, 거기다 특하면 소리 지르고 화 내니 얼마나 더 무섭고 싫겠는가. 그럴 땐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 대부분 겁나니까 묵묵히 참는다. 어떤 이는 그냥 웃는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 이젠 도가 텃나보다. 머리 만지는 것을 어린아이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이들의 문화다. 그러나 한국사람은 머리 쥐어박고 뺨 때리고 귀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 차기 일쑤다. 어떤 때는 아웃솔(신발 바닥창)로 머리를 때리고 여자들 엉덩이를 때린다.

한국 관리자들은 현지에 올 때 말을 배우지 않고 온다.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고 슬쩍 물으니, 6개월 지나다 보면 반복되는 일이나 이 나라 말로 지시 정도는 할 수 있어 일에 지장은 없단다. 그렇다면, 말이 안 통하는 그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발로 지시하면서 못 한다고 마구 소리지른다는 말일 것이다. 우스운 얘기지만, 한국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니 인도네시아말과 한국말을 섞어서 사용하곤 한다. “자르지 마라”라는 말을 “뽀뽀(자르라) 마라”라고 하면, 노동자들은 자른다. 그럼 자신이 말을 잘못해놓고는 잘랐다고 머리를 쥐어박는다. 시간이 좀 흐르다 해도 그깟 지시 정도 하는 것으로서야 말을

자카르타 탕그랑 공단지역 내 한국 봉제공장. 정해진 하루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손이 바쁘지만 하다.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어 서로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오해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 또 말을 할 줄 알면서도, 말머리에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는 한국말로 “새끼야” 라는 말을 덧붙여야 일 시킬 때 효과가 있다고 친절히 귀뜸해주는 한국인 관리자도 있었다. 노동자들을 만나면 우리 일행에게 “새끼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매번 묻는 통에 혼났다.

“거짓말 잘 하는 한국기업.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은 일본기업, 가장 싫어하는 기업은 한국기업”이라고 주저없이 노동자들은 말한다. 순간의 느낌이 아니다. 지칠대로 지쳐가며 회사측과 협상을 한 후 약속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이곳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털어놓는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자, 이제 그들도 회사측의 거짓말에 지쳤다고 한다.

이 외에 한국기업은 부당하고 또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 잦은 부서이동을 통해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유일한 합법노조의 지부장을 회사가 임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게 하고, 아예 합법노조 자체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법으로 보장된 이들간의 생리휴가도 하루치의 일당으로 때우거나 그냥 넘겨버리고, 휴가도 제때 주지 않고, 심하면 휴가수당도 주지 않는다.

## 한국식 관리방식의 노하우, “무조건 거칠게”

한편, 어떤 때는 현지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그 한국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외국인 이름이 나온다. 한국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니, 그럴 리 없단다. 신발공장에서 온 사람이고 하는 것을 보니 꼭 한국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한국사람 편을 드니,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경영방식이 한국식이라고 고집한다. 한국인의 노하우가 타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외에도 한국기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보았더니, 중국기업인 경우가 몇 번인가 있었다. 알아보니, 소유주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생산관리를 한국인이 맡고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하청을 받을 때 반드시 한국인 한두 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 신발업에서 한국인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인이 거칠게 노동자를 다루는 만큼 투자자의 기대 또한 빨리 얻을 수 있으리라는 바이어들의 약은 속셈도 있는 게 아닐까? 한 중국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처음 작업장에 들어가 콘베이어가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지키고 서서는



서 서  
인 경  
얼 굴  
일 때  
노  
이나  
일  
노동  
회사  
선의  
경  
회  
왔은  
유  
요  
!립  
!도  
주  
한  
다.  
에  
그  
가  
가  
갔  
걸  
가  
부  
너  
가  
기  
는  
걸  
는

노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국식 생산방식을 주입했더니, 두 달 후엔 작업장 내에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라인의 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자신의 생산관리방식의 성과를 우리에게 자랑한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뿌듯하다며 늘어나는 생산량을 알록달록 표시한 도표를 보여주었다.

포장도 안 된 탕그랑 공단지역을 몇 시간씩 헤매다 기어오를 때쯤 찾아내어 기세좋게 공장문에 들어서면, 난데없는 우리의 출현에 한국인들이 깜짝 놀란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알고 이 구석까지 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며, “그래, 죄 짓고는 못 살겠지?” 하는 표정으로 우린 가만 웃는다. ‘한국인은 기업이든 NGO든 참 지독한 사람들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떤 경우는, 노동자의 말만 들을 수 없어, 그 공장을 찾아가 직접 한국인의 말을 들어보니, 서로 주장이 틀리다. 그래서 다시 노동자를 만나 확인하는 등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인 인도네시아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같은 한국사람인데 하며 슬며시 동정이 간다. 가족을 한국에 두고 몇 년째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생이 많겠는가? 이곳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부산의 신발공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70~’80년대 부산에 밀집되어 있는 신발업체들이 오르는 인권비와 노사분규를 피해 문을 닫고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 돌아 가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더욱 치열히 생존경쟁에서 이기려고 버티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국인이라고 우릴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먼저들 잘 늘어놓는다. 물론, 능글능글 요리조리 대답을 회피하는 바람에 결국 아무 얘기도 못 듣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 한국기업들 단기투자로 최대 이윤 노린다

인도네시아가 인기있는 투자지로 꼽히는 이유는 금융상황과 노동의 질이 비교적 좋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의 노동이 한국인들의 노동만큼 생산성이 좋지는 않다. 한 봉제공장 사장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파커를 한국인 30명이 400장 만들 수 있는 데 비해 인도네시아인들은 60명이 300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생산성은 한국 대비 65%밖에 안 된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임금이 30% 이상 인

상되어 이곳 투자도 길어야 5년이라며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현지인들과 이들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까워지려는 마음을 한국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전히 단기투자로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 썩 노동력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다.

대개 동남아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여 그곳 노동자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이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직과 의식이 미숙하여 조직적 저항이 적다는 사실, 그리고 현지 국가의 개입 역시 자국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보다는 기업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커다란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은 중국이나 본토 기업과 달리 현지화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는 노사분규를 야기시키는 큰 이유다.

대개 동남아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여 그곳  
노동자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이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직과 의식이 미숙하여 조직적  
저항이 적다는 사실은 커다란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생산관리 담당 한국인은 노사분규의 책임은 한국기업측에 있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국기업과 비교해서 설명해주었다. 이 중국기업은 신발업체 중에서는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그것은 이 기업이 노동자를 위한 투자를 타기업보다 훨씬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창문 하나 없이 찌는 듯한 더위와 먼지로 답답한 작업장 안에 최소로 몇 억을 투자해서 작업장 내 더운 공기를 위로 빼내는 장치를 설치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실도 각기 따로 마련해놓았으며, 기계도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으로 들여놓았다.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인은 빨리 본전 뽑고 가자라는 목적이라면, 중국기업은 계속 이곳에서 살면서 현지화시키겠다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생산품들은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이 많은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고 3시 좀 넘어 나오는데, 벌써 작업이 끝난 노동자들이 작업장 밖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 여러 기업을 방문했지만, 이처럼 활기찬 노동자들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 잠시 서서 구경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산관리가 대부분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던 현상도 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초기 기술자로서 화교와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완충역할을 했고, 억압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이윤 높이기 공헌자들이었으나 점차 회사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이전보다 한국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한다. 화교들은 벌써 한국인 특유의 노하우를 습득한 것일까?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의 한국인 고용을 통해서 한국인의 생산관리방식을 배운



후 이제는 화교나 인도네시아인을 보다 싼 임금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한국식 방식을 통해 생산 정상화를 달렸어도 큰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현지인이 인도네시아인들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며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나름대로 이곳 사장이 현지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과 달리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에 위기를 느끼며 꼬박꼬박 싸고 베트남이나 미안마로 갈 생각을 하진 않는다.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한국인 생산담당자들은 고용 문제에 위기를 느끼며 또 다른 한국인을 요구하는 제3의 국가나 다른 신발업체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않을까? 이들 신발업체 종사자들은 한국인이 만든 거친 한국인의 이미지에 휘말려야 하는 갈등의 제공자이자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중국으로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옮겨가는 신발업체의 마지막 보루들이 아닐까? 약 80% 이상의 신발, 봉제업체에 이런 생산관리 담당 한국인이 있다고 하니, 대다수 노동자들이 한국기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하며, 덕분에 이들 한국인은 외국인 기업주가 저지르는 악행까지도 뒤집어써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것은 한국인에 대한 손상된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 문제를 보는 한국인들의 다양하고 엇갈린 시각들

최근 급격히 나빠진 한국인에 대한 여론에 대해 한국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많은 노사분규가 한인 기업체에 집중됐다는 보도는 잘못 됐다. 외국인 업체는 전반적으로 분규가 많다. 나는 중국인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처럼, 후진국에서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현지 기업체보다 대우가 좋은 외국인 기업에서 분규가 많은 이유는 경영자들이 자기 동족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족문제로서 취급하려는 사람, “외부 불순세력이 순진한 노동자들을 충동질해서 분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국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현지 노동사정에 대한 무지나 현지어 미숙 같은 게 문제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여기 말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도 잘 파악해야 한다. 기후 같은 환경 요인 때문인지 이들은 급하지 않고 낙천적이다. 처음엔 한국스타일로 노동자들을 개조하려다 실패했다. 결국 이들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인도네시아의 한 노동운동가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의 관습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왔으면 여기 법과 관습을 따라야죠. 인도네시아인도 능력 있어요. 민고 관리직을 맡겨야 해요. 노동자들에게만 말과 정서가 통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감독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한국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는 타기업에 비해 인도네시아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인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게 노사분규를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한, “한국기업은 타기업에 비해 현지화가 안 됐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노동자 복지문제에 소홀하다. 노조 설립을 한국이나 일본 기업 다 싫어하지만, 복지는 일본이 잘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특히,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화·종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인을 무시한다. 인도네시아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말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기막힌 사례를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됐다. 슬슬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고 자리를 털러는 차에, 수라바야지역의 한 여성 노동자가 넉살 좋게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 대해 줄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가관이다. 한 노동자가 발에 상처가 나서 붕대를 감고, 그 때문에 새로 슬리퍼를 사 신고 왔단다. 이 공장에선 작업장에선 맨발로 작업한다. 참고로 말하면, 봉제일을 하는 작업장에선 가위나 그외 다른 물건에 다칠 염려가 있어 신발이든 슬리퍼든 신어야 한다. 그런데, 몇몇 한국기업에선 이를 금지한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를 본 한국인 관리자가, 건방지게 슬리퍼를 그것도 새 것을 신었다고, 가위로 찢고는 그 값으로 돈을 주고, 다음 날 부서이동을 시켜버렸단다.

얘기를 들은 우리는 몇 초간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비슷한 우리 속담으로,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될까? 이 여성 노동자는 제 물 만난 고기마냥 우릴 앞에 두고 계속 기가막힌 얘기만 해낸다. 매일 퇴근시간 15분 전이면 봉제부에선 어김없이 연출되는 장면이 있다. 한 한국인 감독관이 출근표를 공중으로 던지면,

### 인도네시아의 한 노동운동가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의 관습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왔으면 여기 법과 관습을

따라야죠. 인도네시아인도 능력

있어요. 민고 관리직을 맡겨야

해요”



# 21세기는 '인간안보'가 문제다

참여연대 인권센터

냉전시대에는 '국가안보'가 위세를 떨쳤다면 21세기에는 '인간안보'가 주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운동도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인권'을 잣대삼아 개입하고 대안을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본지에서는 사회적 인권 시리즈를 통해 인권운동의 새 지평을 연다.

**몇**몇 서구국가의 시내버스를 타보면, 가운데 문은 넓고 경사진 승강대가 인도까지 이어져 있어 아이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탈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유모차를 밀고 버스에 타면 한가운데 큰 유모차 두 대가 자리잡을 공간이 있고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은 무조건 양보를 한다. 이것을 인권의 언어로 풀어보면, 육아여성의 교통의 권리, 이동의 권리에 관한 평등성 확보, 여성의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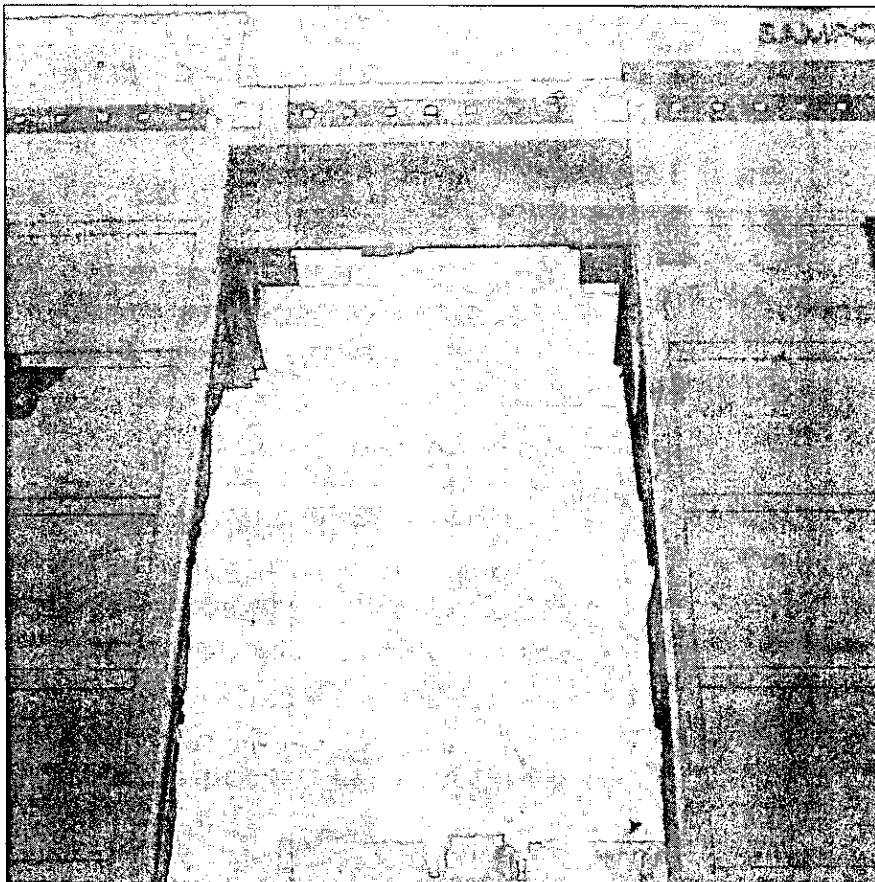
활동의 권리, 어린이의 안전권, 약자보호의 인권의식이다. 또 이런 도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용해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제도와 시민의식 하나만으로도 결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국력과 성장만을 향해 치달아온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참으로 잔혹하다. 이를 가리켜 '한국사회는 대단히 폭력적인 사회'라는 평도 있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 도시개발과정에서 철거당한 무주택자들의 고난, 후진국 수준의 사회복지지는 '잘 보이지 않는 폭력'을 아주 잘 응변해준다. 이러한 현실은 땅값 상승과 줄부의 대거 등장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이제 시민권의 하나인 고문받지 않을 권리는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지게 됐지만, 몇 세기 전만 해도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은 또 당연한 것이었다. 고문은 국가의 권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권사상과 제도의 발전으로 이러한 국가의 권한이 박탈당하고 시민이 이를 견제할 권한이 획득된 것이다. 국가의 권한과 시민권과의 줄다리기가. 현재 시장경제의 논리에만 따르면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는 것이나 이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권한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영역도 곧 인권사상과 제도에 의해서 피해자가 보호받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제도와 사회권과의 줄다리기가.

얼마 전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재해를 포함해 일상적인 재해까지, 현대 도시사회에서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



## 보릿고개 시절 인권 침해는 숙명(?)

사회적 인권은 그 뜻이 별로 새로운 게 아니다. 사회적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경제적 인권이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굶지 않을 권리 및 노동권을 가리킨다. 사회적 인권이란 사회보장권, 심신건강권, 가족과 모성 및 아동의 권리를 가리킨다. 문화적 인권이란 교육권, 문화활동권, 과

학적 진보의 혜택을 받을 권리, 소수집단의 권리를 가리킨다. 이를 통틀어서 사회권 또는 사회적 인권이라 약칭한다.

‘보릿고개’와 ‘피난길’을 겪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를 ‘숙명’이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보릿고개’와 ‘피난길’의 시절에도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한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고문이 국가의 당연한 권한으로 생각될 때가 있었듯이 ‘불평등한 고통’에는 저항이 따르고 또 필요하다. 이는 인권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권리화한 것이라면 사회권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권리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자유의 정신은 유엔의 성립과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철학이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보면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업, 질병, 능력상실, 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이는 사회적 인권의 핵심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다.

### 사회적 인권을 부정하는 반론들

우리 사법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인권을 부정하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 반론에는 보통 서너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이런 것도 인권인가라는 의구심이다. 형편이 되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가 거의 아무런 논란없이 작성되고 채택됐다는 사실과 국

제 사회권 규약(박스 기사 참조)을 현재 129개 나라가 비준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제법과 헌법의 정신으로 볼 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기회제공의 뜻으로서, 시민 개개인이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삶을 실현할 기본 여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삶 자체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실업자나 극빈자, 무주택자와 같이 ‘적절한 생활여건’ 이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인권의 ‘약자보호’ 사상이다. 이는 국가의 의무다.

세번째 반론은 사회적 인권의 보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나 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과잉군사비나 부패비용 등의 낭비를 일부분이라도 줄이면 비용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현실이다. 또 인권의 불평등한 적용을 중지하는 것부터 출발해도 큰 진전이다.

네번째로는 우리 사회와 같이 독재정치와 언론행포가 뿌리깊은 나라에서 일반화된 것인데 사회권의 핵심인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게 되면 국익에 훼손이 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거에 치우친 사람들은 다음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형성해나가는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독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는 독일 보수정치를 대변하는 헬무트 콜수상이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권리화한 것이라면 사회권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권리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자유의 정신은

유엔의 성립과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철학이었다.

1991년에 말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합리적인 보수파조차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권 보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공익 또는 복지와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논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명제일 것이다.

### 인권개념은 사회질서의 개념

어떠한 권리가 인권으로 규정된다 함은 그 권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적인 권리’임을 뜻한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은 절차 또는 질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권개념은 사회질서의 개념이기도 하다. 인권목록은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목록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대거 발생했다.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와 피해자 구제의 원시성,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의 수치스러운 권고안 등이 그렇다.

성수대교 참사나 삼풍백화점 붕괴, 유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인권' 운동 절실하다. 사진은 산업재해의 대명사가 된 원지 레이온 노동자들.

조선 조난에 따른 해양오염 등 대형 재해를 포함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질병 등 일상적인 재해까지, 현대 도시사회에서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급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적 무질서의 증대, 국내적 탈정치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사회변화요인과 변화속도의 증대, 경제성장과 사회교육의 괴리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른바 냉전시대에 '국가안보'가 위세를 떨쳤다면 21세기에는 '인간안보'의 문제가 모든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장 위주 경제개발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구조화한 사회에서 앞으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인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된 경제발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형 경제개발'의 입김이 서려 있는 모든 곳에서 '사회적 인권'을 갖대삼아 개입하고 대안을 세우는 인권운동이 절실하다. '93년 빈 세계인권회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권운동

은 개발-민주주의-인권의 세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경시돼온 사회적 인권의 회복 ('국가안보' 이념의 중압으

로 찌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사회통념을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를 그 구성원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일이다.

### 국제 사회권 규약의 항목

전문

- 제 1조 인민의 자결권과 자원처분권
- 제 2조 가맹국의 규약 실행 조치 의무,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행사 보장
- 제 3조 남녀평등권
- 제 4조 기본권 제한의 원칙
- 제 5조 규약의 부당한 해석 금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경시 금지
- 제 6조 노동의 권리
- 제 7조 공정하며 유리한 노동조건을 가질 권리 : 공정한 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균등, 노동시간의 제한, 유급휴가
- 제 8조 노동기본권 : 노조결성 가입과 권리행사의 한계, 연합단체 결성, 노조활동의 자유와 제한, 파업권, ILO협약 준수
- 제 9조 사회보장권 : 사회보장법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 관련법
- 제 10조 가정의 보호 : 가정과 어린이 교육, 혼인, 임신부 보호와 유급휴가제, 연소자 보호
- 제 11조 의식주 권리와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기아로부터 해방
- 제 12조 건강권 : 신체와 정신의 건강, 가맹국의 조치 의무(유아사망률, 아동건강, 환경, 산업위생, 질병예방, 치료)
- 제 13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 중등교육, 기본교육 장려, 학교제도 발전, 연구장학제도, 학교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설치의 자유)
- 제 14조 초등 무상의무교육의 권리
- 제 15조 과학발전의 혜택을 받을 권리, 문화적 권리